

해상풍력 규제 해소...전남, 2GW 예비지구 선점 나선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허가 일괄처리로 착공기간 대폭 단축

전남 해상풍력 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인허가 장벽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 입지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도는 17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비지구 발굴을 확대하고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을 비롯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

관협의회 운영 방식, 사업자 선정 절차와 환경성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던 제도를 통합·정비해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핵심은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이다. 특별법 체계에서는 공유수면허

가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령,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해 처리된다.

이에 따라 통상 수년 이상 소요되던 사업 준비 기간이 착공까지 약 3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공공 주도로 발굴한 여수·고흥 해역 2GW 규모를 해상풍력 예비지구로 우선 신청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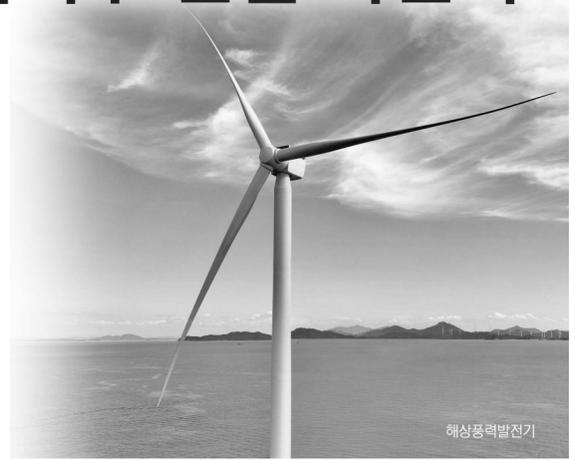
계획입지 중심의 개발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대규모 사업을 선점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남은 신안·진도 일원에 7.3GW 규모 집적화단지를 추진 중인 데다, 다수

의 민간 발전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제도 개편이 더해질 경우 전국 최대 해상풍력 거점으로서의 도약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이후 기존 사업자는 개별 법령 체계를 유지하거나 특별법 체계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예비지구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집적화단지과 기존 사업을 병행해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해상풍력발전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남

이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조사 오래 걸린다...속도 내달라”

“억울함 없게 잘 챙겨야”...‘유해 부실수습’ 경위파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에 대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사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조금 더 각각심을 갖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처분의 결과가 수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초선(서유기에 나오는 부채)을 든 마녀가 장난삼아 (부채질을) 하

면 세상에는 (그 부채질이) 폭풍이 된다”며 “어려버린 펜대 하나가 (국민에게)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진척 상황도 점검하고는 “유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게거나 (정부가) 무관심해서 섭섭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잘 챙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최근 일부 참사 희생자의 유해가 발

견되며 부실 수습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선 “유족이 격양된 것 같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경위 파악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서 쓰레기봉투 비슷한 데에 같이 모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순천의대” 주장 목포서 “후보 사퇴하라” 반발

목포대 총동문회·목포시장 후보 “지역 갈등 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 동부권인 순천을 국립의대와 병원 입지로 정하자고 하자 목포지역에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17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과 통합의 산물을 깨버리고, 표면 쫓는 정치인 강기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 시기에, 오히려 특정 지역을 편드는 듯한 발언으로 갈등을 재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표를 위해 도민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비열한 행태를 단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강성휘 예비후보도 입장문을 내어 “전남 국립의과대학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다. 전남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이를 선거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뒤집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총동문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남권 의대 설립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어렵게 일궈낸 지역사회의 합의 산물”이라며 “강 시장은 역사적 과정과 민주적 합의를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으로 지역 민심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 민심을 하나로 묶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엄중

강 예비후보는 이어 “이미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통합대학본부 설치와 의과대학 분리 배치라는 큰 틀의 합의를 통해 어렵게 출발선에 섰다”며 “강 시장의 ‘순천 일원화’ 발언은 그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전남 동서 간 갈등을 다시 촉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개특위, 의원 정수 문제 책임 있게 다루어”

시의회, 통합의회 정수 불균형 지적...조정 촉구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정수 조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무겁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다루어 달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재 광주는 인구 약 139만 178만명에 의원 61명으로 대표성 격차가 크다”며 “통합의회 구성 과정에서 광주시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는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 결코 가버릴 수 없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통합을 위한 광주·전남의 위대한 결단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전남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대의기명의 시점에서 통합의회 정수 문제의 헌법적 불합리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의 공론화로 응답해 주신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언급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B조 토론회, 오늘 오후 5시 50분...신정훈·정준호

▶1면에서 강기정 후보는 통합대학의 대의는 순천, 대학분부는 목포, 병원은 목포와 순천 등·서부에 하나씩을 제안했다.

주철현 후보는 교육·수련하는 절반으로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순천과 목포, 동·서가 경쟁하고 있지만 절반씩 나눠 입학시키고 교육·수련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것은 기존 지역 의료인과의 상생이며, 지역거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형배 후보는 “후보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대학에서 결정할 일이며, 결정이 안되면 통합특별시장이 중재하면서 정부와 상의해 효율적이고 취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후보도 “대학분부와 의과대학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며 “후보들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거론하면 더욱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청사가 전남 동부권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통해 각 후보에게 주청사 위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민형배 후보는 “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며 “굳이 주청사를 먼 곳에서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체계를 만들겠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후보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의회 청사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 대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후보는 광주에 주청사를 뒀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극 3특의 중심은 광주다. 이를 부인하는 순간 서울과 거뒀아 할 힘이 빠진다”며 “광주 솔리전상에 대한 우려는 정책과 예산을 통해 균형 발전으로 막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조 토론회는 18일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광주MBC를 통해 중계된다. 토론자로는 신정훈·정준호 국회의원 등 2명의 후보만 나선다.

함평 양돈농장서 ASF 발생...도, 긴급 방역 반경 10km 이동제한·정밀검사...24시간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남 함평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함평군 신광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조동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신속히 살처분하고, 청소와 소독을 통해 주변 지역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사후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있는 양돈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도 현장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하

고 있다.

또한 방역지역 내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농가 차단방역 점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함평군 내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련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17일 오후 11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과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6일 기준 올해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24건이며, 전남에서는 영광·나주·무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사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미지급분 114억 지급

중동 여파 농자재 가격 급등 대응

전남도가 국제 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미지급분 114억원을 확보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정했던 예산을 복원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도 비 재원을 50% 감액했으나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삭감된 114억원을 이번 추가 경영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이미 지원 받은 벼 재배농가로, 지급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달 말까지 미지급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